

**행정법**

26.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사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이라크파병결정
-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

27.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.
- ②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.
- ③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.
- ④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⑤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28.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.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.  
ㄴ.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.  
ㄷ.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.  
ㄹ.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, ㄴ, ㄷ

29.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.
- ②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.
- ③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.
- ④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.
- 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.

30.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.
-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.
- ④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타법상의 인·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,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·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.

31.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.
-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.
- ③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.
-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- 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.

32.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.
- ②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.
- ④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.
-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이 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.



36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.
-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에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.
- ③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④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,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.
-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.

37.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.
- ④ 토지·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38.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,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.
-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④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- 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39.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
- ③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
- ⑤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

40.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.
-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.
-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.
-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
41.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.
- ②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·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.
- ③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, 무효등확인소송, 의무이행소송이 있다.
-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,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
-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,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.

42.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.
-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.
- ③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·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.
- ④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·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·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·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.
- ⑤ 생명·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, 압류할 수는 없다.



**47.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**

- ①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.
- ③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.
- ④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⑤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**48.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**

-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,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.
- ④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.
- 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.

**49.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**

- 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.
- ②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.
- ③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.
- ⑤ 도로부지에는 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.

**50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**

- 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.
- ②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.
-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·도와 시·군·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·군·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.
- ④ 호적사무는 사법적(司法的)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.
- ⑤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.